

시론

다선(多選) 시장·군수도 필요하다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前 대한지리학회 회장

6월 지방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독식' 선거판에서 어떤 지자체장이 당선될 것인가는 흥미롭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지형에서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쉽다. 대선 당선된 기초 지자체장이 어떤 지역정책을 펼치고 성공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3선 이상 다선 시장·군수가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 관련 포인터 중 하나는 누가 3선과 그 이상의 다선 지자체장으로 뽑히느냐다. 3선 이상 다선이 되려면 본인의 권력의지 못지 않게 주민들 선택을 받아야 한다. 3선 이상 다선은 무능·부패하지 않고, 참 국민관으로 헌신했다는 표징이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다선 지자체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정책 연속성 때문이다. 초선 단체장은 업무 파악(1-2년), 본인 컬러의 정책 수립과 집행(3년), 재선 준비(4년) 등의 스케줄을 통상 소화한다. 특정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도중에 단임으로 끝나면, 그 정책 또한 용도폐기다. 중장기 계획을 단절 없이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특히 정책의 '회임기간'을 고려하면, 재선과 삼선은 필수다.

둘째, 대외적 영향력 때문이다. 다선 지자체장은 임기 동안 중앙 정·관계와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는 본인과 지역의 정치적 자산이 돼, 대형 국책사업 유치나 국비 확보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초선보다 다선 지자체장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로 중앙부처 관료들과 인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셋째,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전임자 정책·공약은 후임자가 지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선 행정의 불운이다. 단체장이 바뀌면 대규모 인사나 특정 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전임자 정책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도 단선으로 끝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선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담보에 유리하다.

우리 지역에는 다선 지자체장이 펼친 성공 정책이 제법 있다. 첫째 사례는 '햇빛연금'을 성공시킨 박우량 전 신안군수다. 4선(민선 4-5기, 7-8기)을 통해 다져진 행정적 전문성과 노하우, 정책의 연속적 추진이 박 전 군수에게 '햇빛연금 전도사'라는 훈장을 달아줬다. 햇빛연금은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에서 발원한 정책이다. 만약 건너뛰기 4선이 없었다면, 햇빛연금은 결실을 맺기 어려웠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테다.

둘째 사례는 '나비축제'를 성공시킨 이석형 전 함평군수다. 농대 출신 PD답게 나비축제를 개최해 '오염되지 않은 농촌'이란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고, 함평에서 생산되는 '나비쌀'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이다. 곤충연구소를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2008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체는 3선(민선 2-4기)이란 시간이었다.

셋째 사례는 '전북 유통구조'를 혁신한 김종식 전 완도군수다. 완도전복(주) 설립, 드라마(해신, 식객)를 이용한 전복 마케팅은 국내 전복 80%를 생산하지만, 어가는 항상 '을'이었고 산지 유통업자가 '갑'이었다. 2009년 완도전복(주)를 설립해 국내 유통시장의 30%를 장악했다.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전복 매입가의 '표준'이 됐다. 생산자가 '갑'이 되는 유통혁명을 완성시켰다.

이번 선거에도 다선을 향하는 후보들이 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5선을 바라보고 있고, 명현관(해남), 김철우(보성), 김산(무안), 김성(민선 6기, 8기) 등도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선거판은 순천시와 강진군이다. 3선(민선 4-5기, 8기)을 찍고 4선을 향하는 노관규 시장, 3선(민선 5-6기, 8기)을 거쳐 4선에 도전하는 강진원 군수다.

자질과 능력을 무기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와 강진원 후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社說

5·18 기념일이 '탱크데이'라는 스타벅스 막장 마케팅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손정현 대표를 비롯해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사후약방문 격이다. 가장 강력한 징계라고 하지만 이미 때가 지난 후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스타벅스는 명칭이 '탱크'인 텀블러를 세트 구매 시 원래 가격의 10-21% 할인해 판매한다며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다. 탱크와 장갑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향해 자행된 국가 폭력, 무력진압의 상징이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 역시 독재정권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뱉었던 파렴치한 거짓말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차용했다. 명백히 조롱했다. 모욕이다.

광주 지역사회는 격앙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 "역사적 아픔을 가볍게 소비하고 회화화한 무감각한 태도"라고 강력 규탄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도 "경영진의 편향된 인식이 마

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권, 민주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분노를 표했다.

절대 용납못한다. 표현의 자유도, 이벤트도 아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의 논리와 닮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사회적 범죄다. 사법적 판단까지 몰아야 한다. 광주의 수많은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다.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스타벅스의 인면수심에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에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과정이 커지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대중 넘어가 보려는 요량이라면 오산이다.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해야 한다.

정용진 회장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으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직접 사과했다. 신세계그룹은 약속대로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 파악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말 뿐인 사죄에 그쳐선 안 된다.

미래차 인지부품 시험센터 광주 구축의 의미

산업통상부의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 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자율주행차,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이동수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등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광주가 역점을 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자율주행 인증평가 및 실증과 직접 연계된다. 점에서의 의미가 깊다.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물론 'AI(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의 청사진을 적극 이행하는 중이다. 2023년 7월 산업부 공모에서 확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8년까지 진곡일반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일원의 삼각벨트에 708만㎡(22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과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현장중심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2022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AI와 모빌리티가 융합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과 광역통합에 따라 기존 광주의 첨단 자동차 제조, AI 기반시설과 전남의 넓은 물적 공간, 풍부한 에너지 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 글로벌 3강 대도약의 목표가 제시됐다. K-모빌리티 시티로 거듭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미래차 인지부품 시험센터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00억원을 들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 세계적 수준의 검증 장비 9종을 활용해 기업 지원도 본격화한다. 지역 기업들이 해외 인증을 한결 수월하게 획득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조기에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실질 대응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토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사업 참여 기관들 간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정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맺은 결실이다. 산업부의 공모 사업 선정을 재차 환영하는 바다.

현장칼럼



최강нім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우리는 흔히 '평균'이라는 기준 안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의 경계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다. 바로 '경계선 지능아동', 또는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아동들이다.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하는 범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또래 평균 수준의 학습과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의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인지적 처리 속도가 느리고, 추상적 사고나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에서 반복적인 학습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현장에서는 '경계선 지능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느린학습자'라

평균이라는 기준 밖에 있는 아이들, 경계선 지능아동

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할 뿐, 성장의 가능성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느린학습자 아동들을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어려움은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여러 장면에 걸쳐 드러난다. 과제를 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 상황의 맥락을 읽지 못해 의도치 않은 오해를 겪는 모습 등이 반복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처리 방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들이 제도적 기준 사이에서 쉽게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지원이 필요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

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아동은 일관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관계, 작은 변화도 성장으로 인정하는 시선이 마련될 때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은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은 평균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아이들이다. 우리가 기준을 조금만 넓혀 바라본다면, 이들은 더 이상 '경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비교가 아니라 이해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적 여유와, 함께 걸어 가려는 의지일 것이다.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목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포다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선거 공신 정치'가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우위를 보이면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줄서기와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사와 계약, 각종 위원회 구성은 물론 정책 결정 과정까지 공식 권한 밖의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목포시장 선거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권력' 경계해야

특히 과거 시장 개입 논란에 연루했던 인사들과 퇴직 공직자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사실 이런 구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이후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세력과 연결된 인맥, 선거 브로커, 퇴직 공직자 그룹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선거 승리 이후 논공행상식 인사와 각종 이권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공직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구조에서는 능력과 원칙보다 '누구 사람인가'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며, 조직 내부에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만연하면 정책의 연속성

과 행정 신뢰 역시 무너지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식 직함도 없는 인사들이 비선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다. 행정 책임은 시장과 공직자가 지는데 실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외부 인사들이 행사한다면 시민 누구도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간다.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특정 세력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이다. 시장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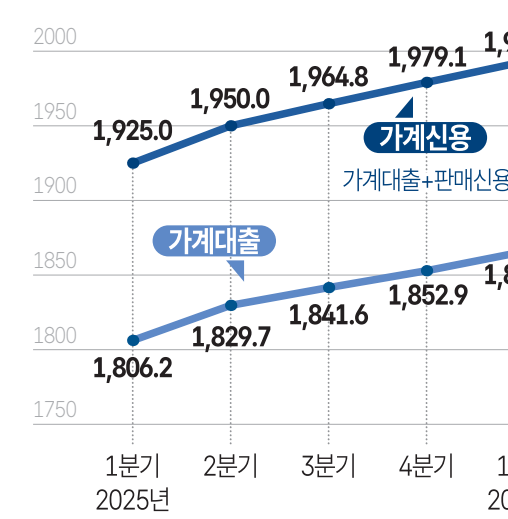
지방자치는 시민이 선출한 권력이 책임 있게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시민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가계신용 잔액 추이

분기말 기준 잠정치, 단위:조원



연립뉴스 자료: 한국은행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 (대출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2천조원에 바짝 다가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9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천979조1천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나며 202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폭은 작년 4분기(+14조3천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천865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증가폭도 전 분기(+11조3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1천178조6천억원)이 8조1천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687조2천억원)이 4조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